

"국세청, 국선대리인 지원대상 확대! 납세자 권익 '쑥쑥'"

- 국세청, 2023. 8

□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2023년 상반기 국선대리인 지원대상을 대폭 확대한 결과 국선대리인 이용자 수가 전년동기 174명보다 35.1% 증가한 235명에 달하였습니다.

* 국선대리인 지원건수 : '22.6월 174건 ⇨ '23.6월 235건 (35.1% ↑)

- 2014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국선대리인 제도는 세무대리인 선임이 어려운 영세납세자가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심사청구 시 지원신청을 하면 무료로 불복대리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제도로
- 2023년 6월 말 현재 전문성과 봉사 정신이 투철한 조세전문가 326명*이 국선대리인으로 위촉되어 영세납세자를 위하여 맹활약하고 있습니다.

* 세무사 266명, 공인회계사 32명, 변호사 28명

□ 국세청은 국선대리인 제도 시행 이후 줄곧 더욱 많은 영세납세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대상 확대*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 청구세액 : 1천만 원 이하('14년)에서 3천만 원 이하('18년), 5천만 원 이하('23년)로 확대
지원대상 :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14년)에서 과세전적부심사청구(' 20년)까지 확대

- 또한, 불복청구서 작성 단계에서도 국선대리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2017년부터 사전신청 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 국세청은 지난 10년간 총 3,427명의 영세납세자에게 불복대리 서비스를 지원하였으며 대리인이 없는 경우보다 높은 인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 소액사건 인용률('23. 상반기) : (국선대리인 선임) 20.4% > (세무대리인 미선임) 3.4% (약 6배)

- 이는 국선대리인이 무보수, 지식기부임에도 불구하고 영세납세자들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적극 활동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도 국세청은 국선대리인 제도가 영세납세자의 실질적 권리구제 수단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대상을 지속해서 확대하고, 제도를 몰라 신청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1

국선대리인 제도 개요

- 국세청은 경제적 사정으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영세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조세전문가들의 불복대리서비스*를 무료로 지원하는 국선대리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불복청구서 작성·보완, 법령검토 및 자문, 증거서류 보완, 국세심사위원회 의견진술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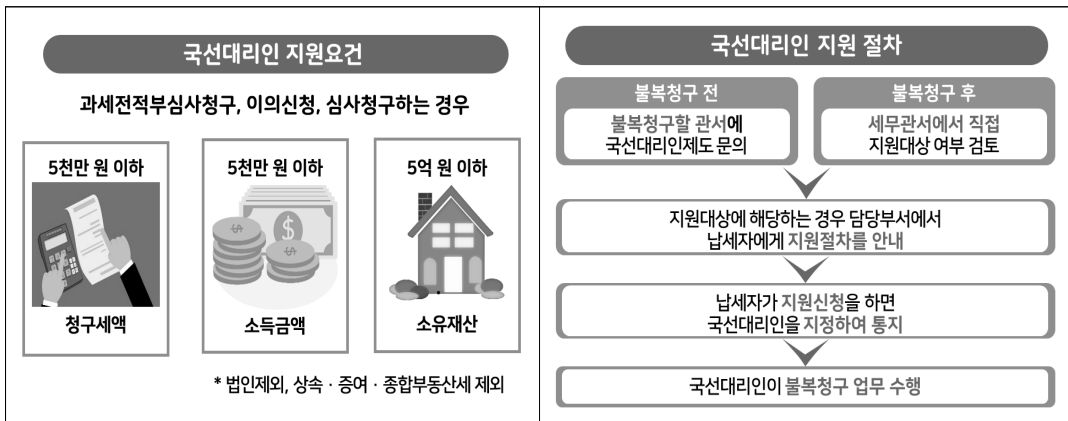
- 2014년 법제화 이래 영세납세자들의 권리구제를 두텁게 지원할 수 있도록 국선대리인 지원대상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청구세액) 1천만 원 이하('14.3.3.) → 3천만 원 이하('18.2.13.) → 5천만 원 이하('23.2.28.)
(지원대상) 이의신청, 심사청구('14.3.3.) → 이의신청, 심사청구, 과세전적부심사청구('19.12.31.)

- 2023년 3월부터 청구세액* 5천만 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5천만 원 이하, 보유재산 5억 원 이하의 영세 개인납세자**는 국선대리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상속·증여세, 종합부동산세 제외

** 법인 제외



- 영세납세자가 국선대리인의 도움을 받고자 하는 경우 편리한 절차와 방법으로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 세무대리인 선임 없이 불복청구를 한 경우 세무관서에서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지원절차를 안내하며, 납세자가 국선대리인 지원 신청을 하면 국선대리인을 지정하여 통지합니다.
- 특히, 국세청은 불복청구 이후 국선대리인을 지원하는 다른 행정심판기관*과 달리 불복청구 전이라도 불복청구서 작성부터 국선대리인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2017년부터 사전신청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조세심판원, 지방자치단체,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영세납세자가 국선대리인 제도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국선대리인 선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세무관서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거나 국세청 홈페이지, 손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홈택스 신청/제출 > 신청업무 > 불복(과적/이의/심사)신청 > 국선대리인 신청

손택스 신청/제출 > 불복청구관련 민원신청 > 국선대리인 신청

- 국선대리인 지정통지를 받은 영세납세자는 지정된 국선대리인으로부터 청구서 작성 등을 비롯한 불복대리서비스를 무료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2023년 6월 말 현재 전국에서 326명의 국선대리인이 활동하고 있으며, 국선대리인은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 등 관련 경력이 3년 이상인 역량 있는 조세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23.6. 기준, 명)

합계	본청	서울	중부	인천	대전	광주	대구	부산
326	12	89	60	48	30	25	20	42

2

그동안의 성과

- 국선대리인 제도 최초 시행연도인 2014년 이래 2023년 6월 말 현재까지 국선대리인의 도움을 받은 납세자는 총 3,427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 2023년 3월부터는 국선대리인 지원요건 중 청구세액 기준을 5천만 원 이하로 대폭 완화하였고 영세납세자 단체 등에 조기에 달라진 제도에 대한 대면 홍보를 적극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 2023년 상반기 영세납세자에게 국선대리인을 지원한 건수는 235건으로 전년동기 174건보다 61건(35.1%)을 더 많이 지원하였습니다.
- 국선대리인 선임 사건의 인용률도 세무대리인이 선임되지 않은 불복 사건의 인용률을 크게 상회하고 있어 국선대리인 제도가 영세납세자의 권리구제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 2014년부터 국선대리인 선임사건이 평균 2.6배 이상의 높은 인용률을 기록하고 있는 점은 국선대리인이 무보수*, 지식기부임에도 불구하고 영세납세자들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적극 활동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 별도의 보수 지급 없이 실비변상적 성격의 소액 수당 지급

- 한편, 국세청은 생업에 바쁜 영세납세자가 제도를 알지 못해 국선대리인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국선대리인 제도 홍보를 다각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 국선대리인과 제도 수혜 납세자의 인터뷰를 담은 홍보영상 및 각종 홍보물을 제작하고, SNS에 게재하는 등 제도 접근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3 향후 추진방향

- 국세청은 국민의 입장에서 국선대리인 제도가 영세납세자의 실질적인 권리구제 수단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영세납세자들이 더욱 많이 국선대리인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를 강화하고, 국선대리인 지원대상 확대 등에도 노력하겠습니다.

4 국선대리인 활동사례

- (사례1) 과세관청은 신청인이 대표이사로 등재된 법인이 법인세 신고를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법인세를 추계결정한 후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함
 - ⇒ 국선대리인은 법인통장 거래내역, 신청인의 실제 근무지 출퇴근 내역, 주식 소유내역 등 증거를 수집하고 신청인이 명의상 대표이사에 불과 하였음을 입증하여 종합소득세 취소 결정을 받음
- (사례2) 과세관청은 주택 양도 후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판단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신청인에게 배우자 소유 쟁점주택이 있음을 확인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함
 - ⇒ 국선대리인은 쟁점주택이 모친 사망으로 신청인이 상속받은 주택이나, 상속인 간 다툼으로 등기상 명의만 신청인의 배우자로 이전한 사실을 쟁점주택 재산세 납부내역 등으로 입증하여 양도소득세 취소 결정을 받음
- (사례3) 과세관청은 인터넷 예매사이트에서 입장권을 대량으로 구매하여 해외여행사 등에 고가로 판매한 신청인의 매출자료를 근거로 하여 공연티켓 판매 수익에 대해 주선·중개 용역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결정·고지함
 - ⇒ 국선대리인은 관련 불복사례를 수집하여 신청인이 공연티켓 등의 판매 주선·중개 용역을



제공한 것이 아닌,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공연티켓을 구매하여 재판매한 사실을 입증하여 부가가치세 취소 결정을 받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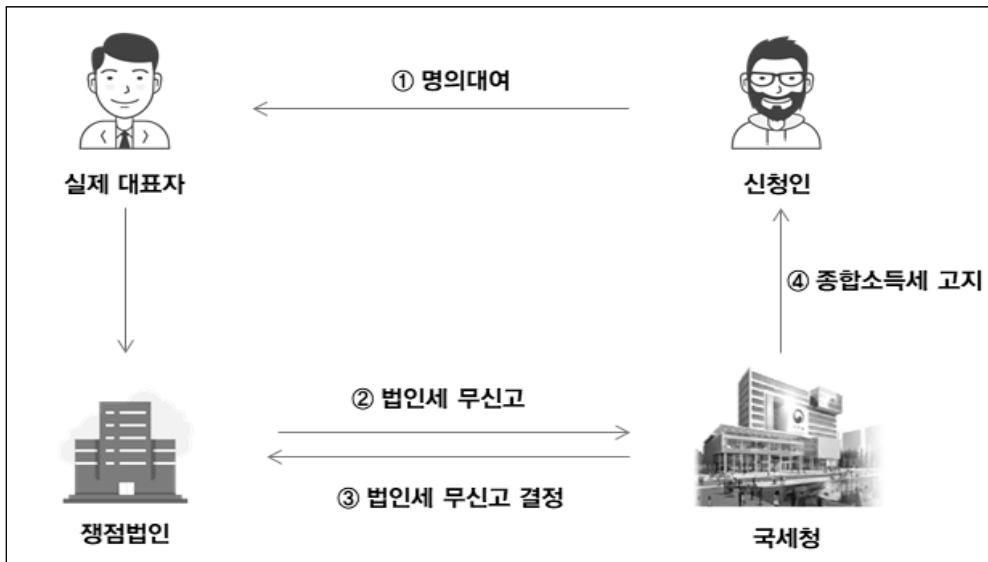
- (사례4) 신청인은 자녀들과 함께 거주하고 있어 자녀장려금 지급을 요청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과 이혼 소송 중인 배우자를 1가구로 보아 배우자에게 지급되었음을 확인하여 자녀장려금 지급 제외 결정함
- ⇒ 국선대리인은 신청인의 배우자가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토대로 신청인이 실질적인 양육자임을 입증하여 신청인에게 자녀장려금 지급 결정을 받음

참고 1 - 국선대리인 활동사례

사례 1

**증거자료 수집제출로 신청인이 쟁점법인의 실사업자 아님을 입증하여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 사실관계 및 처분내용
- 신청인이 대표이사로 등재된 쟁점법인에서 법인세를 무신고하자 추계결정하고, 신청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 결정·고지



- 국선대리인의 활동

- 국선대리인은 신청인이 사업에 관여한 사실이 없음을 입증하기 위해 신청인의 실제 근무지 출퇴근 내역, 실사업자와의 SNS 대화내역, 쟁점법인의 사업자 통장 거래내역 등을 제시하면서,
- 신청인은 쟁점법인의 명의상 대표이사에 불과하였음을 적극 주장

□ 결정내용(이의신청 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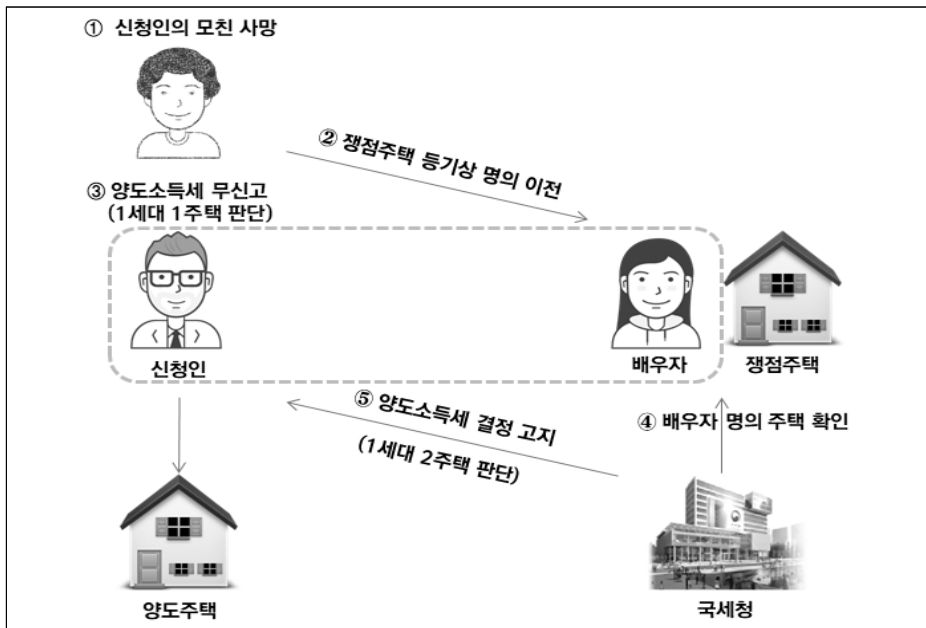
- 신청인이 쟁점법인을 경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실질 대표자에게 사업소득이 귀속된 점 등을 인정하여, 신청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실제 대표자에게 과세

사례 2

쟁점주택은 신청인이 모친으로부터 상속받은 상속주택임을 입증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결정

□ 사실관계 및 처분내용

- 신청인은 거주하던 주택을 양도하며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으로 판단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으나 처분청은 배우자 소유의 쟁점주택을 확인하여 양도소득세 과세 결정



□ 국선대리인의 활동

- 국선대리인은 쟁점주택이 동거봉양하던 모친 사망으로 신청인이 상속받은 주택이나, 상속인



간 다툼으로 등기부상 명의만 신청인의 배우자에게 이전한 사실을 재산세 납부내역 등을 제출하면서,

- 등기상 명의에도 불구하고 실질은 신청인이 상속받은 주택임을 적극 주장

□ 결정내용(이의신청 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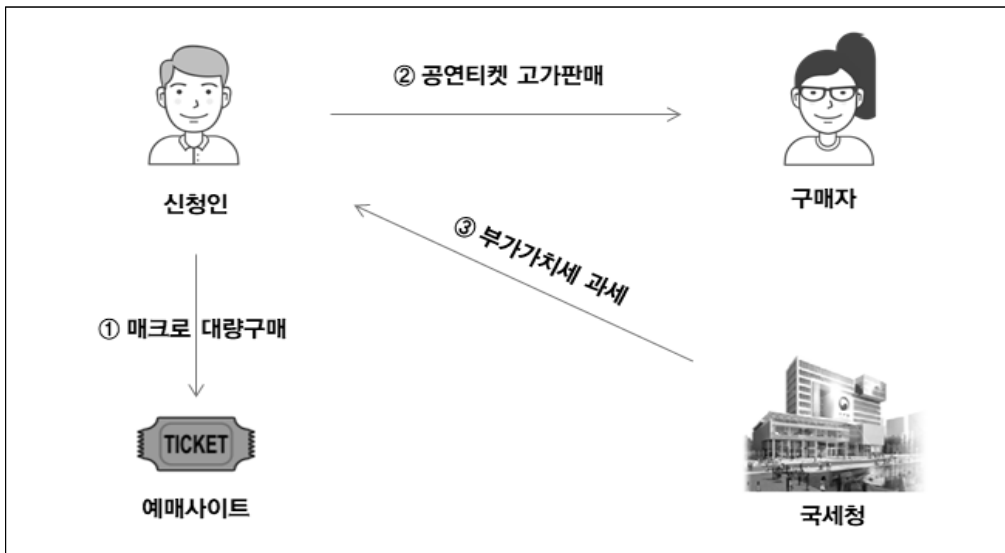
- 쟁점주택은 신청인이 동거봉양하던 모친이 오랜 기간 거주하다 사망해 배우자에게 소유권 이전된 주택으로, 재산세 납부내역 등 거래의 실질에 따라 신청인의 상속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결정 취소

사례 3

신청인의 공연티켓 판매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님을 입증하여 부과처분 취소

□ 사실관계 및 처분내용

- 인터넷 예매 사이트에서 입장권을 대량으로 구매하여 해외여행사 등에 판매한 신청인의 매출자료를 근거로 하여 공연티켓 판매 수익에 대해 판매 주선·중개용역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결정·고지



□ 국선대리인의 활동

- 국선대리인은 관련 불복사례를 수집하여 사업자가 공연티켓 등에 판매 주선·중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대상이나, 신청인은 공연티켓 등을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재판매하였다는 것을 입증하여,

- 공연티켓 판매수익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적극 주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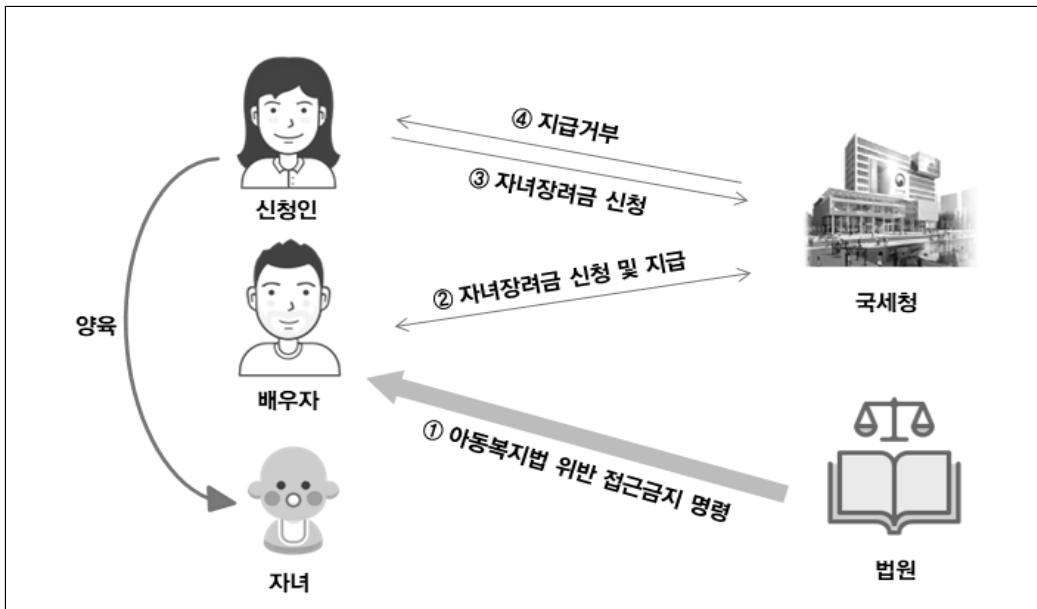
□ 결정내용(이의신청 인용)

- 쟁점 사업의 자금관리와 입장권 예매 및 판매 사실로 보아 중고시장에서 입장권을 재판매한 것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판매 주선·중개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여,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결정 취소

사례 4 신청인이 자녀들을 실제 부양하였음을 입증하여 자녀장려금 지급 결정

□ 사실관계 및 처분내용

- 신청인은 배우자와 실제 별거 상태로, 자녀들과 함께 거주하고 있어 자녀장려금 지급을 요청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과 배우자를 1가구로 보아 배우자에게 지급되었음을 확인하여 자녀장려금 지급 제외 결정



□ 국선대리인의 활동

- 국선대리인은 신청인과 면담을 통해 신청인은 이혼소송 진행 중이며, 신청인의 배우자는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접근금지 명령을 받았고, 신청인이 실질적으로 자녀들을 양육한 사실을 확인하고,
- 자녀장려금의 입법 취지와 목적에 근거하여 실제 자녀들을 부양한다고 볼 수 있는 신청인에게 자녀장려금이 지급되어야 함을 적극 주장



□ 결정내용(이의신청 인용)

- 신청인이 자녀들과 함께 거주하고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으므로 부양자녀 요건 충족한 것으로 보아 자녀장려금 지급 결정

참고 2 - 국선대리인 신청방법

□ (신청 방법) 세무관서에 방문 · 우편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

- 세무관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서 제출
- 국세청 홈택스 · 손택스에서 신청서 제출
(수기로 작성한 「국선대리인 선정 신청서」 사진을 첨부파일로 올리기)
- * 홈택스: 신청/제출 → 불복(과적/이의/심사 등)신청 → 국선대리인 신청
- * 손택스: 신청/제출 → 불복민원 → 국선대리인 신청

□ (사전 신청) 불복청구 제기 전에 신청하는 경우

- ① 영세납세자가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심사청구하려는 세무관서(납세자보호담당관실)에 전화 또는 방문하여 문의하면
 - 국선대리인 신청자격에 대해 상세히 안내받을 수 있음
- ② 본인에게 신청자격이 있다고 판단하여 「불복청구 전 국선대리인 선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 세무관서에서 적격 여부를 확인하여 국선대리인을 지정하고 신청자에게 「국선대리인 신청 결과 통지서」를 발송
- ③ 지정된 국선대리인에게 연락하면
 -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 · 이의신청서 또는 심사청구서 작성을 비롯한 무료 불복청구 대리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
 - * 국선대리인이 불복청구서 작성·보완, 세법검토 및 자문, 증거서류 보완, 국세심사위원회 의견진술 등 업무를 무료로 수행

□ (사후 신청) 불복청구 제기 후에 신청하는 경우

- ① 영세납세자가 세무대리인 선임 없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이의신청·심사청구를 하면
 - 세무관서에서 청구세액 등 요건을 검토하여 국선대리인 제도에 대한 안내문과 「국선대리인 선정 신청서」 서식을 송부
- ② 신청서 작성 · 제출 이후 신청 절차는 사전 신청과 동일

참고 3 - 국선대리인 관련 통계

1. 국선대리인 현황

(명)

구 분	합 계	본청 및 지방청	세무서
합 계	326	45	281
본 청	12	12	-
서울청	89	5	84
중부청	60	6	54
인천청	48	4	44
대전청	30	3	27
광주청	25	4	21
대구청	20	3	17
부산청	42	8	34

2. 국선대리인 지원 여부에 따른 인용률 변동내역

(%)

구 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6월
국선대리인 지원 건	21.0	22.9	21.0	17.0	20.3	20.4
대리인 미선임 건*	10.3	7.5	8.6	8.1	5.3	3.4

* 대리인이 없는 청구세액 5천만 원 ('23. 2. 28. 개정 전 3천만 원, '18. 2. 13. 개정 전 1천만 원) 이하 청구 건으로 국선대리인 지원대상이 아니거나 지원 신청을 하지 않은 건

3. 연도별 국선대리인 지원 건수

(건)

구 분	합 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6월 누계	
							'22년	'23년
지원 건수	3,427	1,731	237	413	396	415	174	235